

“올림픽 개최식장 적기 완공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조양호 조직위원장 본보 보도 관련 긴급 업무보고서 지시

속보=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개·폐회식장의 적기 완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본보 6일자 1·3면 보도)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6일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올림픽플라자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공기 단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직위는 두 번의 입찰에서 모두 유찰된 원인이 부족한 공사비와 빠듯한 공기기간이었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부족한 공기를 고려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

부를 상대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국비 최소 지원 방침인 정부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도 그 기간만큼 공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확정된 예산에 맞게 부대시설 등을 제외하는 등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 스폰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성백유 조직위 대변인은 “올림픽플라자 공사 진행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완공 시기에 맞춰 건설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과 사업 규모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홍현표기자

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내일 총파업

동계올림픽 공사 체불 해결 촉구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권혁병)가 8일 총파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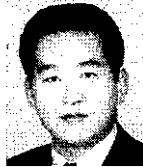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등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동계올림픽 인프라 공사 등 대규모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체불문제 해

결을 촉구한다. 또 적정 임금 지급, 건설기계 지급보증제 정착, 자가용 덤프·굴삭기 불법 영업 단속, 현장 노동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생존권 요구안을 발표한다.

특히 5억원 가량 체불된 강릉 두능-연곡 간 국도확장공사와 관련, 발주처이자 관리감독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원주=김설영기자

건설협회 도회 임원 회의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7일 오후 5시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서 ‘제21대 건설협회 도회 임원 회의’를 개최.



메르스 불황 탈출·전통시장 활성화에 300억 펀다

강원일보-경제단체·기관 지역경제 살리기 공동 캠페인 확산

메르스 불황 극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도는 소상공인 대상 물품 및 자금 지원, 홍보 강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돈아 돌아! 시장이 뜰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전통시장 기는 날’ 운영과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에는 204억원이 투입된다.

도·시·군 및 유관기관 직원들의 장보기 및 식당 이용을 유도하고 도정 공무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일정 비율 구매키로 했다. 또 도 실·과별 포상금 및 연가보상비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대상 물품 및 자금 지원과 전통시장 홍보 강화에는 예비비와 추경예산이 활용된다. 전통시장 내 위생물품 구입 및 소상공인

오늘 도내 40개 기관·단체장 실질적 성과 위한 대책회의

이차보전에 29억원을 지원하고, 방문객 유도를 위해 경품행사·단체관광객 대상 버스임차료·상품권 지원 등에 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경기회복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7일 오전 11시 춘천 제일시장 내 민생반점에서 최문순 지사,

민병희 교육감, 김시성 도의장 등을 비롯한 도내 언론 및 기관·단체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극복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각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춘천지역 4개 전통시장에서 캠페인과 장보기 행사가 이어진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932억 공사에 지역업체 지분 고작 157억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 지역업체 수주액 16.9% 불과

속보=철사업체 전업 우려가 현실화(본보 지난 5월26일자 8면·지난 3일자 8면 보도)되면서 지역업체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관련 전기공사 8건에는 대표사와 공동구성원으로 총 20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춘천 승이전기·일석·우민전기 등은 대표사로, 춘천 조은전기, 강릉 정화통신·백두, 영월 휴성, 고성 현대이산 등은 공동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대표사로 참여한 3개 업체는 지난 4월 전입한 철사업체로 사실상 도내 토종기업 참여는 이번 공사물량의 4분의 1인 5개 업체에 불과하다. 전체 공사액(932억4,344만

원) 기준으로는 16.9%인 157억3,293만 원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도 국가계약법의 “지역의무공종도급 30% 이상” 규정이 없었으면 수주받지 못했다. 이는 지역업체의 실정이다.

수도권의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적이 높은 공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적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형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끼리는 경우가 다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업체 관계자는 “도내 건설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의무공종도급 비율 확대, 신용등급 평가 완화 등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위윤기자

공사명	공사금액(원)	대표사(지역·지분율)	구성원(지역·지분율)
춘천~진부 전차선로	163억	승이전기(춘천·54%)	롯데건설(서울·46%)
춘천~대관령 전철전원설비	162억	삼진일렉스(서울·70%)	정화통신(강릉·30%)
진부~강릉 전력설비	150억	한진중공업(부산·40%)	포스코엔지니어링(인천·30%) 휴성(영월·30%)
진부~강릉 전차선로	141억	일석(춘천·41.6%)	우진산전(충북·40.4%) 태영건설(경기·18%)
서원주~춘천 전력설비	106억	우민전기(춘천·50%)	대보건설(경기·35%) 두산건설(서울·15%)
춘천~진부 전력설비	94억	대호전기(전남·36%)	한진산업개발(서울·34%) 현대이산(고성·30%)
대관령~강릉 전철전원설비	81억	육일건설(충남·70%)	백두(강릉·30%)
지장신호설비 이설	35억	원흥건설(서울·70%)	조은전기(춘천·30%)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자조달)

社 說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공사 비상체제 가동해야

강원도와 2018평창동계조직위는 차질 없는 개·폐회식장 공사를 위해 비상 가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017년 9월 완공 목표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평창동계조직위는 지난달 1일 조달청에 개·폐회식장이 포함된 올림픽플라자 건설공사를 의뢰해 첫 번째 입찰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19일 재입찰했으나 업체가 없어 지난 3일 최종 유찰됐다. 개·폐회식장은 올림픽 개막 4개월 전인 2017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각종 시설 공사를 비롯해 개회식 리허설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개·폐회식장은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상징과도 같은 시설이다. 시설이 완벽해야 한다. 최대한 기간 업체를 선정한다

개막 4개월 전인 2017년 9월까지 완공에 총력을

강원도·조직위,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정부, 국가 행사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 가져야

해도 공사를 단축하기 위한 24시간 공사는 공사비용 증가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다. 그동안 최근의 소치올림픽을 비롯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 등은 개회식에서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장대한 서사시로 표현해 찬사를 받았다. 우리에게도 세계 1등의 정보기술(IT), 흥미진진한 사연의 신화와 민속 문화, 세계 젊은이들을 강타한 K팝 등 내세를 건 많다.

그걸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해야 할 즈음에 개·폐회식장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다. 올림픽플라자에는 개·폐회식장을 비롯해 메달플라자,

성화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초 도는 총 사업비로 1,897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무려 36%를 삭감한 1,228억 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폐회식장에만 940억 원이 소요된다. 몇몇 끝지의 건설사들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나 수치 타산도 맞지 않고, 공기가 쪼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가 공사 차질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10년 대회는 캐나다 밴쿠버에, 2014년 대회는

러시아 소치에 개최권을 넘겨줬다. 2018년 대회는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와의 경쟁 끝에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대회 유치가 성공했고

이제 성공 개최를 위한 시간이 1,0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경기장 건설 속도를 걱정하는 소리도 있고, 기업 후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운용 인력 확보 문제가 시급하고, 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조언도 있다. 그러나 분산 개최, 비용 절감 등 각종 논란은 모두 종결되었다.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 앞에 놓여있는 도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공 개최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강원도와 2018평창동계조직위가 개·폐회식장 공사 업체의 선정에 주력해야 한다. 그간 현실적으로 업체의 선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정부에 잘 인식시켜야 한다.

건설업체 고사 위기... 기술력 향상만이 해법이다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올 들어 지역 종합건설업체 608곳 중 23.7%인 144곳이 수주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내 건설사 4곳 중 1곳은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총생산의 거의 10%에 육박한다. 종사자도 5만여 명에 달한다. 강원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위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이 같은 고충은 9년 전부터 시작됐다. 종합건설업체 수는 2006년 1,071개에서 현재 총 608개로 9년 만에 반 토막 났다. 이 기간 매년 평균 52개 업체가 사라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불안정한 주택·부동산 경기, 공사물량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줄도산을 한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감소는 지역 내 협력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설업체의 물량 계획에 맞춰 협력업체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자금과 장비 인력 공급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금액은 3,733억 원이다. 금융위기를 앞두고 있었던 2008년 같은 기간 3,184억 원 이후 가장 적다. 2011년 수주금액 9,226억 원의 40%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종합심사나찰제를 도입하고 대형공사

의 입찰 참가자격 기준도 대폭 낮추는 등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장 서울 및 수도권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내 업체들이 대형사업에 참여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보유 기술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도 절실하다.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감소에 따른 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감소가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SOC 재정 집행 실적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민자 발주를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공공과 민간의 건설물량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더 이상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도 필요하다.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무장해 자생력을 키워야 강원도 건설산업은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야 한정된 도내 시장을 벗어나 타 지역은 물론 해외 수주 경쟁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올해 건설투자전망치를 4.7%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 메르스로 경제가 위축된 데다 국제경기 동향마저 심상치 않다. 내년에도 내 건설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기술과 자본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전통시장 활성화 300억 긴급 지원

메르스·가뭄 극복, 도민 힘 모으자

도, 이용캠페인·홍보 등

속보=강원도민일보사가 '메르스 극복, 도민 힘 모으자' 캠페인(본지 6월15일자 1면)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총 292억88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203억98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186억8800만원 △전통시장내 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규모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	17억1000만원
상품권 자율구매	155억200만원
도공무원 상품권 일괄구매	25억7000만원
포상급연가보상비 상품권 대체 지급	6억7000만원
전통시장 내 위생용품 구입 지원	3억1800만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확대	26억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53억원
전통시장 이용 촉진 홍보	6억7200만원

생물품 구입 3억18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자금지원 26억원, 전통시장 홍보시책 강화 59억72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도는 또 25개 실국과 본부가 보내 53

개 전통시장과 직접 매칭해 시·군과 관계기관 직원들과 함께 1회 이상 장보기 및 식당 이용하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도청 구내식당을 주 1회 휴무하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전 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한다.

은누리 상품권 등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를 자율 추진하지만 도청 사무관 이상은 매월 봉급에서 봉봉의 5% 이상을 일괄 구매한다. 실과별 포상금과 여름철 휴가 연가보상비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한다.

한편 도는 7일 춘천 제일시장 한 음식점에서 도내 35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하는 메르스 극복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안은복 rio@kado.net

== 사 설 ==

여주~원주 철도사업 해 넘길 셈인가

평창올림픽 성공·중부내륙권 및 균형발전 고려해야

총 연장 21.9km에 불과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이 또 다시 해를 넘길 조짐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만 2년째인 이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발표 시기를 미루며 언급을 피한다. 지난해 연말에서 올 4월, 다시 7월로 연기하더니 아직도 무소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이 실시한 예타 결과가 나왔을 텐데도 정부가 발표를 지연시키는 것이 꺼림칙하다. 이 강후 국회의원은 최근 화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국가 동서철도망 완성하는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잇는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은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다. 평창올림픽과도 연계된다. 원주를 중심으로 여주, 충주, 문경 등 중부내륙권 7개 시·군을 상하좌우로 연결, 교통 요충지이자 국가 균형발전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혁신·기업도시가 입주한 원주시는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부권 거점 도시로 발돋움 할 발판을 마련한다. 사업 추진을 통해 중부 내륙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에는 수도권 관광객

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올림픽 성공과 직결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함께 510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예타 발표 지연으로 사업이 늦춰질수록 평창올림픽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원주를 비롯한 중부내륙권의 성장 속도도 그만큼 더뎠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다. 사업 추진을 원주권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와 도정차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강후 의원의 지적처럼 이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기본설계와 토지보상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올림픽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

정부는 여주~원주 간 전철을 국가 동서철도망 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해안 월곡에서 시작되는 이 철도는 올해 말 성남~여주 간 노선이 완공된다. 올림픽 철도인 원주~강릉 전철은 2017년 말 완공된다. 여주~원주 노선이 제외될 경우 수도권 연결망이 끊기는 셈이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철도 등 광역인프라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중부내륙권 공동발전을 도모해 달라는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3200억 추가 투입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정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원주~강릉 복선 전철 사업에 올해 32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6일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원주~강릉 복선 전철 사업에 32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원주~강릉 전철 예산은 당초 9200억원에서 1조2400억원으로 늘었다.

추경에 편성된 3200억원은 노반 및 궤도공사 추가 시행 3100억원과 분야별 감리 용역비 등 부대경비 100억원이다.

국토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교통수요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라며 “올림픽의 청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2017년 적기 개통에 필요한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6월말 현재 공정률이 42% 수준인 상황에서 노반공사가 정상추진되고 있고, 궤도와 전기공사가 이달 착수돼 공사가 진행중”이라며 “예산 추가 투입으로 공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11조8000억원 규모로, 당정은 앞서 지난 1일 협의를 통해 이달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 2015.07.07(화)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오늘 21대 임원회의 개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7일 오후 5시 강원 춘천 도회 회의실에서 제21대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평창올림픽플라자 터키 또 '유찰'

박한 공사비에 수익성 문제 해결 안돼... 업계 외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린 터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올림픽플라자 건설공사가 2번째 유찰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조달청을 통해 이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지만, 경쟁입찰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입찰이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첫 번째 공고 때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 개의 건설사(컨소시엄)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공사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일원에 연면적 6만4800㎡ 규모의 개·폐회식장 및 홍보관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예산은 940억원 규모다.

조직위는 두 차례 유찰이 확정됨에 따라 내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차 공고 또는 계약방식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잇단 유찰은 물론 앞서 공사발주 이전에도 상당기간 지연이 발생한 만큼 조속히 추진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송권기자 skbong@